
제10차 국제재정포럼
(The 10th Korea-OECD International Policy
Forum on Budgeting)
출장 보고서

2022. 10. 26.

1. 출장 개요

- (일시) '22. 9.28(수)~10.02(일), 3박 5일(출·입국일 포함)
- (장소) 프랑스 파리
- (출장자) 고영선 원장직무대행, 김학수 재정·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, 전해원 성과확산팀 전문연구원

2. 출장 목적

-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'제10차 국제재정포럼'에 연사로 참석 및 행사 개최 진행 지원
 - * 상기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, KDI와 OECD가 공동주관하는 국제포럼으로 KDI는 동 행사 개최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았음.

3. 출장 일정

- 9.28(수)
 - 고영선 원장직무대행: 11:30 인천 출발 → 18:30 파리 도착
 - 김학수 선임연구위원, 전해원 전문연구원: 10:05 마드리드 출발 → 12:10 파리 도착
15:00~17:00 행사장 사전 점검 및 동선 확인
 - * 상기 2인은 앞선 '2022년 재정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' 출장지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프랑스로 이동

- 9.29.(목): 행사 1일차 참석 및 개최 지원

9:00~9:30	등록 및 네트워킹
	개회식
9:30~10:00	개회사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축사 안일환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고영선 KDI 원장직무대행 환영사 Kerri-Ann Jones OECD 사무차장

10:30~12:00	<p>(세션1)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건과 재정준칙</p> <p>발표 1: 포스트 팬데믹 시대 도전적 재정 여건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</p> <p>발표 2: OECD가 직면한 도전적 재정 여건 Marc Robinson, OECD 선임고문</p> <p>발표 3: 한국형 재정준칙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</p> <p>발표 4: 재정준칙의 유용성 Barry Anderson, 전 미국 예산관리국(OMB) 예산부국장</p> <p>토론 :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Douglas Sutherland OECD 부장 Simon McLoughlin 주OECD뉴질랜드대표부 경제참사관</p>
13:30~15:00	<p>(세션2) OECD 국가들의 친환경 예산과 탄소중립 목표의 미래</p> <p>발표 1: OECD 국가들의 친환경 예산(Green budgeting) Andrew Blazey,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</p> <p>발표 2: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가능성과 향후 진화 방향 Ken Cleary, 아일랜드 공공지출 개혁부 기후변화 총괄</p> <p>토론 : 정희철 기후환경예산과장 Peter Johnson 주OECD호주대표부 공사참사관</p>
15:30~17:30	<p>(세션3)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</p> <p>발표 1: 지출검토(Spending review) 제도 Alfrun Tryggvadottir OECD 지출검토제도 총괄</p> <p>발표 2: 사회서비스 분야 민·관 협력(PPP) 사례 Marten Blix 전 스웨덴 재무부 국장</p> <p>발표 3: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혁 Hans Christiansen OECD 기업지배구조 부부장 대행</p> <p>발표 4: 성인지 예산 Jon Blondal OECD 공공관리·예산부장</p> <p>토론 : Helene Durocher 주OECD캐나다대표부 참사관 Vicky Rock 영국 하원 국장 Efi Tsanti 그리스 재무부 국장</p>
18:00~20:00	<p>리셉션</p>

□ 9.30.(금): 행사 2일차 참석 및 개최 지원

9:30~11:30	<p>(패널 토론)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</p> <p>발표: OECD의 지출효율화 방안 소개 Jon Blondal, OECD 공공관리·예산부장</p> <p>좌장: Barry Anderson 전 미국 예산관리국(OMB) 예산부국장</p> <p>토론 :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Douglas Sutherland OECD 부장 Simon McLoughlin 주OECD뉴질랜드대표부 경제참사관 Efi Tsanti 그리스 재무부 국장 Vicky Rock 영국 하원 국장 Peter Johnson 주OECD호주대표부 공사참사관</p>
11:30~12:00	<p>폐회식</p> <p>폐회사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Barry Anderson 전 미국 예산관리국 예산부국장 Jon Blondal OECD 공공관리·예산부장</p>
12:00~13:30	<p>오찬</p>
14:00~16:00	<p>행사장 정리 및 마무리</p>
18:00~20:00	<p>환영 만찬(주OECD대한민국대표부 주최)</p>

□ 10.1(토)

- 고영선 원장직무대행, 김학수 선임연구위원, 전해원 전문연구원: 21:00 파리 출발 → 익일(10.2) 16:00 인천 도착

4. 주요 논의 내용

세션 1.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 여건과 재정준칙

□ 발표 1. 한국의 재정여건과 재정개혁과제(김학수 선임연구위원, KDI)

- 2021년 KDI에서 수행한 장기 기준선 재정전망에 따르면,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4.8%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
 - 기준선 전망에 사용된 인구 중위기준 전제가 실현되지 않고 저위기준으로 접근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70% 수준에 달함
 - * 2021년 합계출산율이 0.81명으로 저위기준과 유사하여 저위기준 실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
 - 2026년부터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지 않고 2021~2025년 중기 계획 상 2025년의 14.7% 수준의 재량지출 비중이 2060년까지 지속되면 국가채무비율은 230% 수준으로 급등할 전망
 - * 기준선 전망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2026~2030년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 평균 수준인 11.8%를 달성하고 이후 유지된다고 전제
- 이러한 재정위험을 고려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대내외 경제사회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적 정책과제 수행을 통해 지출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
 -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며, 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으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8.2%p나 축소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
 - 이외에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,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이 함께 추진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전망 144.8%에서 87%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
-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들은 모두 도전적인 정책과제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재정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참여해야 함.
 - 재정준칙의 도입은 이러한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추진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으로 의미하는 바가 큼
 - 또한 2050년의 바람직한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

구체적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재정비전 2050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필요

□ 발표 2. 팬더믹 이후 OECD 국가들의 도전적 재정여건 (Marc Robinson, Lead Consultant, OECD)

- OECD 국가들의 높은 국가채무비율과 계속 증가하는 재정수요로 재정의 책임 결여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재 여러 국가가 당면한 도전적 재정여건을 “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팬더믹 이후 재정수요에 대응”하는 것으로 규정
 - 향후 장기 재정수요가 크게 확대될 분야로 기후 변화, 보건, 장기요양, 국방, 인프라, 연금을 제시
- 높은 국가채무비율, 구조적 적자, 높은 이자율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
 - 현재 높은 국가채무비율을 더 높일 수 있으므로 투자지출을 예외로 삼고 확대하는 정책기조를 재고해야 하며 그린전환을 위한 국가채무 증가도 신중할 필요
 -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서는 특정 지출의 감축이 필요하고 지출효율화는 매우 어렵고 더디게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출검토를 통해 정책적으로 주요 지출 감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주요 정부지출 변화에 대한 유권자 설득 필요
 - 보건지출과 같은 수요자 기반 지출의 통제, 유효한 지출 규율과 한도 설정, 새로운 지출 결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율 등을 통해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

□ 발표 3. 한국의 재정준칙(안) (강영규 재정기획심의관, 기획재정부)

- 팬데믹 이전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%이하로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좋았음. 한국의 경우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, 국가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음.
- 다만,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부채가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,

국가재정운용계획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재정준칙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지하게 됨.

- 총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, 고령화로 구조적인 지출소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규율 강화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
- 한국의 재정준칙 방향성
 -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은 -3%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고, 국가채무비율이 60%를 초과하면 -2%로 관리재정수지 적지비율 한도를 축소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에 노력할 계획
 - 전쟁, 국가적 재난, 경기 침체 등의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명시하여 위기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
 -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채무상환에 활용되는 세계잉여금 비중을 30%에서 50%로 상향 조정하여 결산과정에서 확보되는 여유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상환에 활용 (단, 5년마다 한도 재검토)
-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, 사회보장재정제도에 대한 선제적인 노력도 필요
-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향후 재정 준칙이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 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구조조정 및 개혁 또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

□ 발표 4. 재정준칙의 유용성 (Barry Anderson, former Assistant Director for Budget, OMB, United States)

-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악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낮은 이자율로 국채발행을 가능하게 함.
 -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의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보다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, 재정준칙은 여러 측면에서 유용함.
- 재정적자나 국가채무에 대한 준칙이 정치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축소하여 재정준칙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의 요건들을 고려할 필요
 - 예산편성의 시계를 1년에서 중기로 확대

- 미래 재정여건에 대한 기준선 전망과 정책변경에 의해 초래되는 재정효과 분석
- 재정여건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필요한 경우 교정하는 절차의 제도적 보완
- 정치과정에서 재정준칙이 준수될 수 있는 메커니즘

세션 2. OECD 국가들의 친환경 예산과 탄소중립 목표의 미래

□ 발표 1. OECD 국가들의 그린예산 (Andrew Blazey, Deputy Head, Budgeting and Public Management, OECD)

- OECD 국가들의 그린예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음의 여섯 가지의 관찰 결과를 제시
 - 그린예산 지출계획의 질은 다양하고 “그린워싱”에 의해 과대포장되는 경향은 계속되고 있으나 예산편성 과정의 평가도구는 개선되는 상황
 - * 그린워싱은 사실상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인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행위
 - 탄소 예산과 국가별 목표치와 관련된 탄소배출 수준이 더 강조되는 경향
 - 탄소저감 뿐만 아니라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증적인 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음
 - 그린예산은 예산의 전주기(계획-준비-승인-실행-검토·감독)에 걸쳐 통합되는 양상
 - 기후변화 및 환경 부처와 재정당국 간의 그린예산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조정이 증가하는 경향
 - 독립적 재정 기구 등의 역할이 강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진행 중
-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(Adaptation)에 필요한 지출 추정치는 2030년 약 3천억 USD로 증가 예상되고 현재 적응분야 지원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여러 국가들이 탄소세 및 그린채권 등에 의존하여 향후 재원조달의 가능성은 있음
 - 적응분야 과제에는 기후 대응 전략의 적용 범위, 그린워싱에 의한 과대포장 추정치, 비용 및 편익 측정등을 포괄

- 순환경제, 지속가능한 발전, 공정 전환 등의 관련 이슈에 대한 예산 지원도 고려할 필요
- 기후 변화 목표는 '기후 비상'의 수준을 반영하는 상당히 의욕적인 수준으로 국가 및 다자간 대응에 의해 목표수준이 상향됐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본 궤도 진입은 여러 국가들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
- OECD 2022 Green Budgeting Survey의 잠정 결과에 따르면, 계획-재원조달-평가-측정 및 보고 등을 통한 예산개혁(Budgetary Reform) 측면에서 정부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됨.
- 기후 관련 고려사항들은 정부부처 책임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후 관련 계획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등 예산프로세스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음
- 그린예산에 관심이 있는 정부 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.

□ 발표 2. 그린 목표의 이행 (Ken Cleary, Head, Climate Change,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, Ireland)

- 아일랜드는 2018년 대비 2030년 51%의 누적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며 이를 2021년 Climate Action and Low Carbon Development Act 개정에 반영
- 동 법에 의해 2035년까지 5년 주기의 “탄소예산”을 작성해야 하며, 여기에는 각 부문별 배출 상한과 담당 정부 부처의 책임이 명시됨
- 이러한 중기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실행계획을 매해 작성해야 하며 첫 번째 법적 계획은 2022년 12월에 공개될 예정
- 그린목표에 관해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 과정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수립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수단을 제공
- 아일랜드의 그린예산은 사회적 선택을 반영한 결과이며, 성과·성인지·다양성·평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과정을 보장함
- 아일랜드 그린예산의 주요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수단별 효과성 관련 정보를 정책입안자, 일반 국민, 아일랜드 그린국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제공

- 탄소감축 계획에 부합하는 그린예산을 편성하려면, 기후변화에 부정적정부 지출의 파악, 감축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고도의 평가지표의 개발, 감축목표 달성 비용 부담 방법의 결정이 필요함
- 2023년 예산안은 탄소세 톤당 48.5유로로 인상하고 이로 인해 추가확보될 6.23억 유로의 재원은 높은 에너지 및 연료 가격에 노출된 취약계층 보호, 공정전환, 새로운 환경대응 등에 투자에 사용될 예정
 - “2023년 탄소세 기금 활용계획”은 탄소세 인상에 의해 추가 예산을 배정받는 부처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들의 성과지표를 사전에 개발하여 성과계획을 작성
 - 2021~2030년 국가개발계획의 기후환경 영향 평가를 128개 정책수단에 대해 수행한 결과, 67%는 기후환경 성과에 긍정적, 17%는 중립적, 16%는 부정적으로 평가됐음
-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규모의 파악, 지출의 효과성평가,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 설득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·개선할 필요
 - 지속적인 국제공조하에서 아일랜드의 전반적인 성과예산제도의 개선과 사후적 평가인 지출검토를 수행할 필요
 - 향후 OECD와 협력하여 기후 위험 및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관련 인프라투자의 직간접 탄소배출 영향을 파악할 계획

세션 3.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

□ 발표 1. 지출검토 (Alfrun Tryggvadottir, Lead, Spending Review, OECD)

-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지출검토는 지출의 우선순위와 지출재구조화를 위한 핵심도구로서 재정총량의 관리와 예산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되는 것으로 평가
 - 지난 10년 동안 지출검토를 수행하는 OECD 국가들의 수가 16개국에서 31개국으로 크게 증가
- 성공적 지출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7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
 - 지출검토의 목표와 범위의 명확성
 - * 지출검토의 목표는 참여자들의 구조와 역할을 결정하므로 처음부터 명확

히 전달되어야 하며, 지표로 절감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절감액 식별에 유용

- * 지출검토의 반복적 주기적 접근은 매년 검토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
- 정치적 리더십과 지출검토 수행자 사이의 명확한 역할 구분
 - * 정치적 리더십은 지출검토의 목표와 범위가 설정되는 시작과 권고안 채택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결론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
 - * 지출검토를 수행하는 부처는 지출검토의 분석과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최종 채택된 권고안을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
- 지출검토 전반에 걸쳐 명확한 거버넌스의 설정
 - * 지출검토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명확한 거버넌스 구조가 설정되어야 하며, 지출검토의 거버넌스는 검토 전반을 감독하고 결과를 해당 부처에 권고하는 운영위원회와 외부컨설턴트를 포함한 분석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 위원회로 구성
- 예산체계와의 통합 필요
 - * 지출검토의 일정은 단기 및 중기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다양한 평가 및 성과 정보는 지출검토 과정에서 이용 가능해야 함.
- 책임 있고 투명한 방식의 지출검토 권고사항의 이행
 - * 지출검토의 최종 결과물인 권고사항들의 이행을 감독하고 책임을 소관 부처에 지우는 것이 필요
- 지출검토 보고서 및 프레임워크의 투명성이 보장될 필요
 - *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토의 목표 및 범위부터 최종 권고사항을 담고 있는 지출검토 보고서와 지출검토 거버넌스는 공개되어야 함
- 지출검토의 수행방식과 구조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
 - * 재정지출 사업들의 지속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출검토의 수행방식과 구조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출검토 제도의 운영환경 변화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
- 여러 OECD 국가들이 처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강력한 지출검토를 통한 지출 재구조화는 정부의 재정여건에 개선에 중요하므로 종합적·실질적 지출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예산과정의 일부분으로 정착시킬 필요

- 향후 지출 우선순위와 지출 재구조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.

□ 발표 2. 사회서비스 민관파트너십 (Marten Blix, former Director, Ministry of Finance, Sweden)

- 1990년대부터 공공기관, 상품시장, 사회복지 분야의 개혁이 진행되어온 스웨덴의 경험 중 사회복지 분야의 민영화 사례와 성과를 통해 민관파트너십에 기초한 사회서비스 전달을 위한 교훈을 제시
 - 2017년 기준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민간생산 비중을 살펴보면, 장애인 개별 보조 75%, 1차 의료 37%, 고등학교 26%, 홈케어서비스 24%, 요양 20%, 유치원 20%, 의무교육 15%, 특별건강관리 7%의 순으로 나타남
- 교육분야의 민영화로 인해 영리 포함 독립학교 재학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결과, 무상의무교육의 학생 당 교육비 절감, 학생만족도 개선, 교육성과 개선을 가져왔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성과 및 진학률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
 - 스웨덴의 영리를 포함한 독립학교는 friskolor 또는 fristående skolor를 의미함.
 - 다만 고등학교 학점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정책 디자인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
- 의료분야의 민영화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개인병원은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지만, 대중화에 성공한 원격의료는 1차 진료의 11%를 차지하지만 다소 논쟁적
 -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다 잘 매칭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효율성 측면의 장점이 있으나, 효과적인 전자분류체계 없이는 과잉진료 및 진단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
 - * 스웨덴의 원격진료비는 직접방문진료과 유사 또는 소폭 낮은 수준이며 모바일 은행ID를 이용하여 정부재원으로 운영되는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음
-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규제감독 강화, 불시 점검 등 더욱 강력한 감독체계를 민간 및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에 적용하고 감독결과에 따라 폐쇄조치 등이 필요

□ 발표 3.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혁 (Hans Christensen, Acting Deputy Head, Corporate Governance, OECD)

- 공기업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일반 국민이며 공기업 개혁의 목표를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OECD 가이드 라인을 소개
 - 국가 소유에 대한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, 각 공기업은 투명한 재무 및 비재무 목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.
 - 국가 행정은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공기업 소유권을 행사해야 하고 국유기능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규제기능과 분리되어야 함.
 - 공기업은 다른 기업과 동일한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, 민간 기업들과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경쟁을 왜곡해서는 안 됨.
 - 국가는 공기업의 다른 투자자에 비해 어떠한 과도한 이점도 가져서는 안 됨.
 - 공기업과 그 주주는 직원, 채권자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함.
 - 공기업의 목표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토해야 함.
 - 공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이사회는 정치적 개입 없이 기능해야 함.
- 공기업 개혁의 3대 우선순위는 국가 소유권 행사에 대한 중앙 통제권 보장, 각 공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적 목표의 개별 및 공유, 관련 국가 기관에 연간 보고 및 책임을 종합에 있다고 주장하며 우선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제언

□ 발표 4. 성인지 예산 (Jon Blondal, Head,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, OECD)

-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현재 OECD 회원국의 60%가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
 - 고용, 기업가정신,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.
 - 한국의 성별 고용률 격차가 2000년 이후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지만,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큰 것으로 평가
 - * 2021년 OECD 여성고용률 평균: 60.5%, 한국 여성고용률: 57.7%
 - 2000~2019년 한국 전체 경제성장의 12%가 성별 격차 해소에 의해 설명된다

는 OECD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성별 고용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거시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강조

- 현재와 같이 재정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결정 과정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과정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양성평등 및 성별 격차 축소의 목표를 달성할 필요
 - 특히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.

종합토론

□ 발표 1. OECD 지출효율화 프레임워크 (Jon Blondal, Head,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, OECD)

- 다양한 재정수요와 향후 신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원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지출효율화의 성공을 좌우하는 10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
 - 고위급의 정치적 약속과 명확한 목표 제시
 -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 경제적 가정
 - 3~5년 중기 시계의 기준선 재정지출 제시 및 정기적 업데이트
 - 고위급의 목표를 반영한 하향식 지출한도 설정
 - 명확한 범위와 목표를 갖고 예산과정에 밀접히 연계된 지출검토
 - 지출의 효과성, 효율성, 결과 등 증거 기반 평가를 반영한 지출 결정
 - 대출과 보증의 통합관리를 통해 우발부채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련 재정위험을 관리하고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
 - 예산 당국과 관련 부처들의 협력 강화 필요
 - 예산의 투명성 강화
 - 독립재정기구 등의 효과적 감독 보장
- 상기 10대 원칙들의 최종화 및 설문조사를 통한 추가 연구 진행 예정